

## 농촌교회와 노인복지선교

조 시 현(목사, 경기 화성 화산교회)

장수(長壽)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한결같은 소원의 하나이고 축복으로 인정되어 왔지만, 장수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노인 인구와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어려움을 당하는 노인들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러한 어려움은 자신이나 가족의 잘못이 없더라도 사회변동과 사회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많은 노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을 전후하여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문제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심각성도 더해가고 있다.

한 국가의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인구의 노령화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1996년 5.8%, 2002년 현재 7.9%(전체인구 4천 7백 6십 4만명, 65세 이상 인구 3백 7십 7만 2천명)이며, 2010년에는 10.7%, 2019년에는 14.4%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인구 노령화는 그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는데 특징이 있다. 일반

적으로 노령인구의 비율이 7%에 도달할 때를 노령화 사회(aging society), 14%에 도달할 때를 노령화된 사회(aged society)라고 한다. 이처럼 노령화 사회(7%)에서 노령화 된 사회(14%)에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을 보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0년, 그리고 노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일본이 25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노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은 2003년 4천 5백 3십 7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액의 4.6%에 불과해 노인인구에 비해 예산규모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전체 예산대비 노인복지 예산규모는 미국(40%), 일본(18%) 등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는 후진국 수준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약 87%나 되고 있으며, 앞으로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질환을 가진 노인 즉, 유병장수 노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생활보호 대상자의 비율은 10.4%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이면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등 복합적인 욕구(double jeopardy)를 가지고 있는 노인도 일정수준 상존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복지 정책만으로는 다양화되어 가는 노인복지 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현재의 노인복지 정책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나 급여의 수준이 충분치 못하다. 둘째, 노인복지 사업의 내용도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0.3%에 불과한 시설 수용노인을 위해 중앙정부 노인복지 예산의 30%(2003년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현재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급성질환의 치료에 치중되어 있어서 장기요

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7%(2003년도)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자원봉사자나 공동모금 등 민간자원의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령화 추세와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 및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인문제에 있어서 농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농촌노인의 경우 부부가 함께 사는 가정이 52.38%이고 부부사별이 31.43%인데 비해 도시노인은 부부가 함께 사는 가정이 67.96%, 부부사별이 17.43%로 농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사별한 외딴노인이 더 많다. 교육정도에 따른 분포를 보면 농촌노인은 무학 56.19%, 초등졸 38.10%로 나타났고, 도시노인은 무학 32.04%, 초등졸 31.07%로, 농촌노인의 학력수준이 도시노인보다 낮다. 건강상태는 '농촌노인은 건강하다' 19.05%이고, '도시노인은 건강하다' 36.89%로 농촌노인에 비해 도시노인이 지각한 건강상태가 더 높다. 게다가 세계무역질서가 가트(GATT) 체제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한국농업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그리고 수입 농산물에게 국내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피나는 시장 쟁탈전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의 하나는 농촌·도시간의 인구이동, 즉 이농현상이다. 1966-90년 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된 농촌지역(郡部)에서 도시지역(市部)으로 순이동(純移動)한 인구수는 매년 평균 56만 명이었으며, 이동인구 중에서 49.2%가 15-29세 사이의 청년층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70년부터 1990년까지 20년 동안 총인구는 연평균 1.43%씩 증가해 왔는데 반해서 농가인구는 연평균 3.8%씩 감소해 왔으며, 이에 따라 총인구에 대한 농가인구의 비중은 44.7%에서 15.6%로

크게 줄고 있다. 농가인구 중에서 농림어업 취업인구는 연평균 1.91%씩 감소해 왔는데, 이중에서 15-29세 사이의 청년층 인구는 연평균 9.13%씩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해 왔고, 30-49세 사이의 연령층은 연평균 3.18%씩 감소해 왔으나, 50세 이상의 노동인구는 오히려 연평균 3.15%씩 증가해 옴으로써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UR협상을 비롯한 개방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농업의 장래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어 농가인구와 농림어업 취업인구의 감소폭은 더욱 현저해졌다. 즉 최근 농가인구는 연평균 6.7%씩, 그리고 농림어업 취업인구는 연평균 4.75%씩 감소함으로써 지난 20년 동안의 감소율보다 두 배나 높았다. 연령별 농림어업 취업인구의 감소율을 보면 청년층(15-29세) 노동인구의 감소율이 연평균 15.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장년층(30-49세) 노동력의 7.14%였다. 따라서 직업의 분포는 농촌노인이 무직 28.57%, 농업 71.43%이고, 도시노인이 무직 93.2%로써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직업적 분포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WTO등 개방화 정책에 의한 젊은층의 이농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하지만 재정능력과 인력 및 조직은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의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는 정부의 부족한 노인복지 대책을 보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140여 개(사회복지관 54개, 아동복지시설 38개, 장애인복지시설 12개, 노인복지시설 19개, 부녀복지시설 19개 등)에 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부문에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나 기독교계에서는 연간 8천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는 이 가운데 매우 적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게다가 1997년도 국민일보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농어촌 1만 5천여 곳의 경우 1년 예산이 3백만 원 이하인 교회가 전체의

18.7%, 3백-5백만 원 35.5%, 2천만 원 이상은 10.5%로써 농어촌 교회의 53.8%가 교역자의 최저생활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5백만 원 이하의 연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6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경험한 것을 감안한다면 농촌교회의 노인복지는 요원하기만 한 실정이다.

필자가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한 지역의 농촌교회의 현실을 백분율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촌교회 가운데 69.9%가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16%가 일회성 경로잔치 제공, 3.2%가 봉사활동 주선, 2.2%가 불우노인 결연과 노인급식, 타노인 복지시설 후원, 그리고 1.1%가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문제 상담실, 탁노소 운영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정 운영이나 부업 지도 및 알선, 노인의료 건강사업, 물리치료실 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회의 부대시설 역시 교육관 26%, 탁아소 등 선교원 19%, 교육 및 사회복지 겸용관 14%로 조사됐으며, 사회복지관은 불과1.1%에 머문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교회가 노인복지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재정부족 40%, 시설 및 공간부족 32%, 행정절차 복잡 12%, 지식부족 7%, 목회자나 제직회의 이해부족 6%순으로 집계됐다. 노인복지와 관련한 재정 역시 46%가 교회재정, 32%가 특별헌금, 10%가 후원금 모금, 3%만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나타났으며 노인복지 담당자의 경우도 과반수 이상이 교회 내 관련 부서 담당자, 자원봉사자 14%, 전담직원 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므로 지금은 한국사회 속에서 교회가 담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 중 노인문제가 절실한 때임을 강조해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는 공경과 보호의 대상인 노인문제와 관련해 한국교회가 선교 및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호소한다.

따라서 농촌교회와 노인복지 선교를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

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교회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며 농촌 노인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의식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지도자의 철학과 지도역량에 따라 그 조직이 움직여진다고 할 때 담임목사의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실천적 의지는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그 초기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려는 노력 속에 복음을 전파해 왔다. 특히 일제의 식민통치, 남북분단, 6·25동란으로 이어지는 암울했던 역사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며 무지와 압제 속에 지쳐있을 때 교회는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농사기술을 보급하고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면서 복음을 전파해 왔다.

우리 교회의 이러한 복지 활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창1:27)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귀한 존재이므로 세속사회의 어느 조건에 의해서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시대의 노인들은 일제 암흑기와 6·25를 거치면서 '잘살아 보세'를 외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시대의 뒷안길에서 소외된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이제 이 노인들에게 인간성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어야 한다. 복음전파의 내용인 복음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복지활동도 그 본질의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의식 고취를 위해서 지역단위의 교회 연합회 등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범 사례들을 발표함으로써 그 실효를 거두게 해야 한다.

둘째, 농촌교회는 어려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교회 중 86.1%의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이상이면서 순수

사회봉사비로 지출하는 비율이 5%이하인 경우가 73.1%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봉사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내 고장 내 이웃이 없이는 내 교회도 없다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교회가 교인들에게 십일조를 장려하듯이 교회도 사회를 위해 최소한 전체 결산액의 10%는 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교회 교단은 교단적인 차원에서 농촌교회가 체계적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각 교단은 대부분 농어촌 교회를 위한 농어촌부와 사회복지부를 두고 있다. 교단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교회와 연대하여 복지사업을 해나간다면 영세한 농촌교회에도 불구하고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때로는 도시교회와 결연을 맺어 상호관련 속에서 일을 추진함으로써 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교회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전문화, 다양화, 체계화되어야 한다. 국민1인당 GNP가 향상되면서 노인들의 복지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하며,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회 인적자원의 전문적 활용이 필요하다. 농촌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반면 지역특성상 따뜻한 이웃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교회의 구역이나 부서의 인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물론 노인복지 서비스를 하자면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이 넉넉해도 하고자하는 의욕이나 신념이 없으면 노인복지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나름대로의 노하우(know how)가 있다면 그 형편에 맞는 노인복지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혼자 사는 노인가구와 어느 한 구역을 결연하여 돌봐주기를 시도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하여 철저히 훈련시켜 상담, 일거리 찾아주기 가사보조원 파견, 노인의 말

벗 되어주기, 음식배달, 외출 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미진한 복지대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써야 한다. 실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는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